

월요광장

송가인과 유산술, 그리고 문화비평의 종언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포시장과 공무원들의 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시장 명의의 짤막한 '사과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 "미스트롯 공연 관련하여 좋은 행사 유치해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으나..." 덧붙여 시청의 '미디어마케팅팀장'의 '공지 사항'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규모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치한 미스트롯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값이 최저 8만8천 원에서 최고 11만 원이었던 지극히 상업적인 공연을, (이날 목포 공연의 수익만 6~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 전국의 지방도시만 도시는 남김없이 훑고 다니는 이 전국 투어 공연을, 지역 공무원들이 '유치했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TV조선"은 정확히 10년 전에 당시 이명박 보수 정권이 탄생시킨 '종합편성 채널'('중편') 가운데 하나다. 당시 야당과 진보 성향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이를 무릅쓰고 "중편"을 위한 미디어에 관련된 공청회와 시민들의 정치적 의도가 10년 만에 어떻게 적중했는지를 위의 '목포해

프님'이 잘 보여 준다. 그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말하자면, 문화 영역의 보수적 탈정치화 혹은 문화비평의 종언이다.

심상찮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계는 비판과 비평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에서 송가인 에 이르기까지 물신화된 대중적 인기는 눈에 뵈히 보이는 미디어 권력과 기획사의 횡포와 착취에 대해서도 눈 감아 줄 것을 요구한다. '노예계약'이라는 제목의 거대한 사기극이 펼쳐지고, H.O.T 멤버들의 재결성 콘서트에서 옛 소속사의 권리 주장 때문에 제 이름을 쓰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 사건('H.O.T'를 'H.O.T.'라 부르지 못하는)이 벌어져도 그 '노예계약'의 문제점은 더 이상 대중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뿐더러 지식인들의 관심조차 얻지 못한다. "TV조선"과 송가인 사이에 체결된 '노예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합정역 5번 출구'와 '사랑의 재개방'과 같은 히트곡을 통해 송가인 못지 않은 깜짝 트로트 스타로 부상한 '유산술'은 이러한 세태를 자주적으로 풍자한

다. '유산술'은 인기 개그맨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로서 쓰는 예명인데, 그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명으로 불리면서 깜짝 트로트 스타로 부상한 데 대해, 역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출연한 공중파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재석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데, 유산술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죠." 이는 물론 청중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유머 멘트였지만, '벼락 스타 만들기'의 한 세태를 고발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유산술'을 탄생시킨 공중파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는 프로그램 자체로 한국식 신자유주의의 표어를 제시해 준다. 이 시대의 스타는 그렇게 쉬거나 노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이 시대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사회적 구조와 배경을 짚는 문화비평은 이미 '썰대스럽다'고 매도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듯하다. 문화비평의 힘은 이제 지역에서 쪼그라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빨대를 쏙뚝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망을 추수해 가는 저 중앙 미디어 권력과 거대 기획사들의 횡포에 맞서서.

社說

F1대회가 남긴 빛 미래세대 발목 잡는다

전남도가 F1(Formula One) 대회 조직위원회를 청산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F1 대회 준비·운영·지원 업무를 맡는 기구로 설립된 지 딱 10년 만이다. 공식적인 청산 절차는 오는 2022년에 시작되는데 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위약금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1조직위는 2015년 대회 미개최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지불을 요구한 FOM과의 계약 당사자인데, 영국법상 채권소멸시효(6년)를 넘기는 2022년까지 위약금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마무리될 수 있다. 한데 지난 2016년 5월 5차 협상 결렬(FOM 위약금 1150만 달러 요구 → 수용 불가 통보)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제안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위약금 분쟁이 종료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지난 2009년 F1대회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뒤 4년간 F1 대회를 치르며 1902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회 주관 기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남도가 발행한 2848억 원의 지방채다. 이중 올해까지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도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갚아야 할 빚만 해도 115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남해안 일대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개발,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영암-해남 관광중심형 기업도시' 선도사업으로 추진됐던 F1 대회가 오히려 미래 신규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천억 원이 넘는 F1 대회 빛이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F1 대회는 허황된 꿈만 갖고 탁상에서 만든 잘못된 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앞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두고두고 타산이 짙어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 도심 관광 활성화 예산 제때 지원을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돼 '문화도시 광주' 홍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축으로 광주의 문화-예술권을 도보로 돌리는 '도심관광 트레일' 프로그램의 예산이 소진돼 이달부터 중단됐다.

광주시 위탁을 받은 '광주도시여행청'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심관광 트레일'은 ACC를 핵심 축으로 도심 역사·인물, 문화예술, 관광명소 등의 특색 있는 테마별 도보관광 코스와 스토리텔링을 개발·운영하는 무료 관광프로그램이다.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객이 2015년 411명, 2016년 929명, 2017년 656명, 2018년 518명, 2019년 10월 말까지 166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광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관광객들이 발길

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도시여행청'과 광주시는 프로그램 중단 배경으로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이용객 때문에 예산(3000만 원) 소진이 빨라졌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광주시의 무대책이다. 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긴급하게 편성하기 어려운 예로가 있기는 하나, '광주도시여행청'이 지난 10월에 예산 소진 상황을 알렸음에도 시 측은 "사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게다가 광주시 해당 부서는 정기투어가 중단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시가 아무리 풍부한 문화·관광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관광객에게 팔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관광프로그램 중단을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無 等 鼓

단식은 기독교 역사에도 등장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나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 40일 동안 단식을 했다. 특히 예수님은 금식을 하는 동안 수차례 마귀들의 유혹을 받는데,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차원 높은 가치를 위해 결코 속세의 유혹과 욕심에 휩쓸리지 않았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뒤우치는 회개 의미로 단식을 했지만 신약시대 들어서에는 회개의 중

단식 단상

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으며 국민의 비판과 외면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황 대표가 단식에 앞서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전광환 목사를 찾아갔다든 사실이다. 전 목사는 평소 상식 이하의 발언과 잇단 정치적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집회 중 현금 강요와 대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기도 했다. 소속 교단으로부터도 제명될 만큼 신앙을 잃은 사람이다. 그런 전 목사를 찾아가 함께 만세를 부른 황 전도사의 모습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뒤우치는 회개 의미로 단식을 했지만 신약시대 들어서에는 회개의 중

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금식을 했다. 기독교의 단식은 식욕이라는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게 아닌,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절대자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생뚱맞은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 신학대학을 다녀 전도사 자격을 취득한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행한다는 단식의 목적은 공수처 설치 법

단식은 기독교 역사에도 등장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나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 40일 동안 단식을 했다. 특히 예수님은 금식을 하는 동안 수차례 마귀들의 유혹을 받는데,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차원 높은 가치를 위해 결코 속세의 유혹과 욕심에 휩쓸리지 않았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뒤우치는 회개 의미로 단식을 했지만 신약시대 들어서에는 회개의 중

꿈꾸는 2040

대한민국, 불신 사회를 넘어 공정 사회로



차승세 위민연구원 이사

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때와 지금 세대의 일자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당시에 비해 대학 졸업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대학 졸업자에 맞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의 비매칭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게다가 공기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분노를 넘어 강한 허탈감과 포기 동맹을 낳고 있다.

시민들의 아픔과 분노도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요구로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가난하지만 평등했던 사회에서 풍요롭지만 불평등한 사회로 급격하게 변했다. 그 과정에서 빈번하게 지적됐던 것은 공정성 사비에 따른 불신이다. 오랜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불신은 더 심해졌다. 시민들은 심판에 해당되는 입법·사법·행정부부 신뢰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 심판을 믿지 않으니 사회적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이 고민했던 문제는 극단적인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시민의 주권이 훼손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고, 삼권분립을 하고, 임기 내에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방어적 장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의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던 대원칙일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사비도 자주 지적된다. 언론사별로 진보와 보수 성향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은 자명하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하며, 진실은 '사실의 속성'을 내면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진리'라고 정의하고 싶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서로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그것을 받아쓰고 왜곡하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는 시민들을 양분화시킨다.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구조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언론 환경을 탈진실 시대라고 한다. 사실을 체크해서 진실을 가리는 게 무의미해져 버린 사회 현

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전통적인 미디어 시대가 가고 개인 방송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뉴스를 각자의 방식으로 생산·편집·소비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만 소통한다. 사회의 어젠다를 제시하던 전통적 언론의 기능이 축소돼 버렸다. 소셜미디어, 특히 유튜브를 통해 편을 가르고 광장으로 모이고 선동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방식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사회 불신을 조래한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있다. 갈 길이 멀지만 민주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경제적 성장만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의 접근도 무의미하다. 더 많은 민주화와 성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성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투명성 수준은 세계 50위권 밖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에만 민한 공정성을 요구할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낮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 불신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 시기 아닐까.

기 고

아동학대 신속한 대응체계 필요하다



이보라 전남서부권아동보호기관 사례관리팀장

78.4%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17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학대 행위자 특성 중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해,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함께 부모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의 대부분은 "네가 아이를 키워봤나" "네가 데려가서 키울 것 아니면 우리가 정사에 끼여들지 마라" 등 아동학대의 원인을 본인의 그릇된 양육관이 아닌 아동의 기질과 문제 행동으로 돌리며 합리화한다. 이런 부모를 만날 때면, 필자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과업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거부적인 학대 행위자 외에도 넘어야 할 벽은 많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에 67개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만 설치되어 있다. 이는 1개의 기

관이 평균 3~4개의 지자체를 관할해야 함을 뜻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팀 소속 상담원 13명이 전라남도 내 서부권 일대 8개 관할 지역을 모두 담당한다. 평균적으로 상담원 1명당 약 60개의 사례를 담당하며,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약 세 배 많은 수치다.

'공공성 부재'도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이다. "너희가 경찰도 아닌데 왜 가정에 와서 조사를 하느냐"와 같은 학대 행위의 비협조적인 대응에도 법적 절차와 같은 지원이 부재한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가 아닌 민간에 위탁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5월, 정부가 민간기관에서 수행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앞으로 민간이 전문적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아동학대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자체는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도 상담원 확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전문적 사례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후후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민간이 심리 상담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적극 적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조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하여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끓임없는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른들이 더욱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뛰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열심히 뛸 만 큼다가오는 2020년은 아이들이 살기에 더욱 안전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업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기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